

주는 이: 띄지

받는 이: 제 11대 총여를 준비하는 장다. 틈틈 선거운동본부

내용: 여성실업문제에 대한 발제문

IMF시대라는 말은 이제 이 시대를 일컫는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 버렸다. IMF시대 하의 전사회적 구조조정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IMF시대의 또 다른 얼굴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30년대 대공황 이후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이 보였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나고, 흔히 포스트 포드주의라고 불리우는 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산업 부문, 특히 노동 부문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중심 원리인 유연화 전략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한 질적 유연화가 있을 것이고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만을 강요하는 수량적 유연화가 있을 것이다. IMF위기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남한 사회에서의 유연화 전략은 수량적 유연화라는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IMF위기 이후 더욱 뻔뻔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수량적 유연화 전략의 결과는 노동인력의 대량감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은 비용절감과 탄력적인 노동력 활용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 노동권은 위협받게 된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족임금제는 본질적으로 주변적인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여성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배태하며 이는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여성우선해고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지고 있는 여성 노동자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로, 모성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이 먹여살려준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급기야는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 IMF이후 여성고용의 변화

IMF이후 여성노동 동향을 볼 때 두드러진 내용 변화는 무엇보다도 여성고용상태의 악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임금이 10.6%의 감소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퇴직금과 각종 복리후생, 각종 수당,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비용을 지불받지 못한다. 또한 생리 휴가, 연월차 휴가를 받을 수도 없으며 비정규직 고용은 승진 및 승급의 문제, 정년의 문제, 배치 및 이동 등에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되므로 유연한 노동시장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분명히 필수적인 제도일 것이다. 더군다나 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파견근로제는 이미 제조업이나 생산직종, 단순사무직 등에 양산되어 있었던 불법적인 파견업을 합법화함으로써 임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성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전반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셋째, 해고나 고용상의 차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것은 97년 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성우선해고의 관행이다. 해고 과정은 다양한데 우선 기혼 여성이나 장기근속여성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형식을 때면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거나 무연고지인 지방발령을 여직원에게 마구 내림으로써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게는 이유없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여성을 우선 해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비단 사무직에서만 아니라 여러 직종에서, 전국적인 범위로 업종과 사업장의 규모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다.

합리적 기준 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여성이 우선 해고되는 현상에 반대해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얼마나 여성우선해고를 막아낼 수 있을까는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업의 인사관행이나 문화에서 여성들은 정당한 인정과 평가를 받지 못해 왔고 이것을 이용해 '인사고과가 나쁘기 때문에 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성우선해고에 합리성이라는 구색을 맞추려고 해왔던 기업들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 여성실업의 현실

- 현재 여성실업자의 유형

현재 여성실업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의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실업자의 개념으로서 폐업이나 부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실업자들이다. 특히나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이 영세, 중소기업체이므로 부도나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실업자들은 대부분 임금채불 상태에서 실직된 노동자들이었으므로 이들의 실직은 대부분 생존권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둘째는 신규실업자이다. 98년 7월 여성 신규실업자는 5만 9천명으로 전체 여성실업자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성실업자 중에서 신규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6.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신규채용의 감소와 기존의 여학생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채용차별의 심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98년, 99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대졸인력은 거의 대부분 비경제활동으로 전환될 것이며 그 결과 이들은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없는 비운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자로서 대부분 전업주부들이다. 이들은 주로 경제위기로 인한 남편의 실직과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첫 번째 유형의 실업자보다 연령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숙련수준이 대체로 낮으며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에 취업되기는 희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특히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유형은 실직여성가장들이다. 이들 중 이혼이나 사별상태의 배우자 없는 기혼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여성이 가장 재

취업하기 힘든 계층이므로 이들의 실업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의 실업문제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실업률의 문제점

우선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근거로 해 여성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여성실업의 현황은 남성에게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 반면, 여성경제활동인구는 남성에 비해 세배 가까이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보더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은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남성에 비해 약 8배 가량 감소했으며 여성의 취업자 감소도 남성에 비해 배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바와 반대로 여성실업률의 증가폭은 남성실업률의 증가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첫 번째의 이유는 많은 수의 여성실업자들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 무급가족종사자 가운데 실제로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위장된 경우가 많다.

둘째, 여성실업자의 상당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난이 장기화될 상황에서 실직되면 남성실업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는데 비해 여성실업자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빠지게 된다. 또한 불경기 상황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실직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생계의 곤란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전선에 뛰어드는 모습 역시 흔하다. 후자의 경우에도 분명히 실업자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으로써 여성실업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실업통계를 통해서도 여성실업자의 규모나 추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업대책의 문제점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우선 여성실업대책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 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이나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의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올해 3월부터인데 여성노동자의 62.7%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이 고용보험 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실업급여 대상 여성노동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실업대책의 하나인 직업훈련도 실업급여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제한적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미용, 도배 등의 몇가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 전체 실업대책을 볼 때,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다는 오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재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실업자,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대책은 더욱 불투명하다.

현실상

임상연구 → '위험' 연구
(대안)
(A/B)

이 사회에서 과연 '自治'가 주어져 있는가.

언제 우리에게 스스로 삶의 결정할 권리가 주어졌단 말인가?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거대한 괴물의 입 앞에 서있다. 모든 것을 잘근잘근 씹어버리고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뱉어버린다.

내뱉어진 찌꺼기로 남느니 차라리 괴물에 스며들어 버리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허무한 불가능성과 제한된 가능성을 넘고 대안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는가?

자치를 억압하는 이 사회에서 대해 이/의/제/기한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自治'란 주어지지 않았다.

대리 정치의 꼭두각시, 경제발전이라는 거대한 바퀴의 아주 작은 기계 부품, 소비 문화의 중독자.

그러나 저들은 항상 마치 우리들의 정치, 우리들의 경제, 우리들의 문화가 실현되고 있다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

돈과 권력을 가진 저들은 모든 것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는다. 자기가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도내로만 밀어낸다. 밖으로 밀려난 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위협 당할 '자유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저들의 포섭과 배제의 정치를 은폐해버리려는 술책만 있어왔다.

있는 자들의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들의 정신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그들은 온갖 종류의 통제 기제들을 만들어낸다. 공장을 돌리고 생산 활동을 하며 경제를 유지해나가는 노동자들에게 과연 '자치'가 주어졌던가? 우리는 경제위기를 틈타 안그래도 빈곤한 노동자들을 더욱 주변부로 밀어넣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 값싸고 온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더욱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컴퓨터로 대체 가능한 노동자들은 그냥 정리해고시켜버린다. 마치 현재의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이 너무 배부르기 때문이라는 듯이. 그것도 모자라 한국의 노동자를 사용하다가 더욱 싼 노동력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닌다. 제3세계의 노동자 또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궁핍과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공장이 돌아가게 한다. 이 노동자들은 손가락이 잘려도, 굶어도,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언젠가는 보상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일한다. 그들을 속여서 불법으로 고용한 사람은 누구인데 왜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의 공포를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또한 인간관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성'에 대한 억압적 통제도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결정할, 자유롭게 인간 관계를 만들어나갈 기본적인 권리 - 성에 있어서, 자신의 육체에 있어서 과연 '자치'란 주어졌는가? 만인의 '자유'는 사실 소수의 자유였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자본과 가부장이 이 사회의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주변부로 밀려난 동성애자들이 마치 사회의 악 그 자체이자 균 덩어리라는 사고는 도대체 누구의 기준이며 누구의 사고인가?

자치를 더욱 강력하게 억압하는 것, 우리들을 더욱 더 숨막히게 하는 것은 바로 가부장제이다.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연 '자치'가 주어졌는가? 호황기에는 여성의 시대이니 온갖 화려한 수사들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마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착취와 비참한 삶이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타나는恨에 찬 귀신의 이야기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불황기가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하는 여성들은 가정으로 쫓겨나버리고, 가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가사노동에 시달리던 주부들은 "남성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자치'가 이미 만들어진 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 대신 쟁취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신을 스스로 통치할 권리'.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부터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자치'가 보장되는 질서란 누구를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 다른 누군가 희생되는 그러한 사회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미 승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쟁의 원리도 아니며, 가진 것이 없다고 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배제의 원리도 아니다. 중심이 모든 권력을 잡아버리고 그 대다수의 나머지는 사회의 찌꺼기가 되는 그러한 사회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자치'를 주장한다.

자치를 억압하는 대학에 이/의/제/기한다!!

진리와 진보의 공간,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대학. 12년 간의 갑갑하고 억압적인 교육을 끝내고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온다. 그러나 한 학기가 지나고 일 년이 지나가면서 대학 또한 자치를 억압하는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모 교수와 무슨무슨 처장이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교세가 약해진다!!"하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이란 사실은 단지 학교 선전에 불과했던가?

심지어 대학 교수라는 위치에서 수업 시간에 여성들을 비하하는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들을 일삼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대학당국은 쉬쉬하려고 했던 태도를 보았다.

우리는 96년도 이른바 '한총련 사태' 이후 특하면 전경들을 불러들였던 대학당국의 오만함, 그래서 제2의 도서관 침탈이 일어날 뻔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후, 일방적인 '종합관 이념교육관화'와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거짓말을 들어야만 했다.

우리는 연세대 학생으로서 누려야 하는 의료복지 - 매 학기 꼬박꼬박 돈을 적립한 건강공제회가 우리들의 눈앞에서 파산해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아무런 해명도 못들었다.

학부제는 학생들과의 아무런 논의없이,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되면서 학생들은 제2의 입시를 거쳐야 하고 개인주의적 경쟁심리를 유발하게 실시되었다.

우리는 제2인문관 건설 과정에서 학교당국에서 학생 자치공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것을 목격했다.

일방적으로 싸여진 교육의 소비. 공공성을 상실한 채 대학당국과 재단의 이윤을 위해 대학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 - 이것이 대학의 현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분히 정치적인 공간일 것이라고. 대학은 사회 속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섬이 아니었다. 대학은 역사적 산물이다. 특히 일류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는 사회의 지배계층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의 보수적,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그래도 흡수하면서 재생산해왔다. 그리고 대학 안에서는 항상 학교당국과 학생들 사이에 권력관계가 존재해왔다. 그 권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마치 '피지배'와도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자치'가 보장되는 질서란 학교당국과 재단을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 학생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대학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미 승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쟁의 원리도 아니며, 소수의 기준에 따라 우수하지 못하다고 판결나버린 학생들이 주변부로 밀어내는 배제의 원리도 아니다. 대학당국이 모든 권력을 잡아버리고 대학에서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생들은 무관심 속에서 밀려나버리는 그러한 대학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자치'를 주장한다.